

---

# 1월 2-3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2016.01.07.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 차례

### 1. 정부행정 (정미나) |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제 박차...능력 제고인가 공무원의 '영업직'화인가

### 2. 지방자치 (윤재설) | 4

지방소득세 독립시켜놓고 세무조사는 금지?

### 3. 여성 (김명정) | 7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의해야

### 4. 과학기술 (고광용) | 1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성적 화려, 질적 성과 최저... 혁신노력을 자극하는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 필요

### 5. 주택·건설 (김성달) | 15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근거 없이 부풀려져 고분양가 유도

###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 18

북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국 정부 등의 강경 대응, 위기에 처한 한반도 민중의 민생과 평화

### 7. 정치 (박철한) | 25

청와대-새누리당, 노동개약, 정치개약 시도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편집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mailto:0225jsk@hanmail.net)
- ❖ 문의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mailto: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mailto:gaea123@naver.com)

# 1. 정부행정

## ○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제 박차...능력 제고인가 공무원의 '영업직'화인가

- 지난 1월 5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이는 삼성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014년 11월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평가제 확대 일환으로서,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 기존에는 주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과평가 및 이에 연동한 보수체제를 하위 공무원에게도 강화시킴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기존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5급 이하에게는 근무성적평정제도가, 4급 이상에게는 성과목표달성 평가제가 적용돼 왔음. 이것이 본 개편에 따라 4급 이상에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적용되고, 성과급 비중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2배 수준까지 확대되어 실장급의 경우 1800만원까지 보수차이가 벌어질 전망.
- 한편 하위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은 종전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경력점수 비율은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평가등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토록 할 예정. 경력점수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성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 또한 향후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 이와 같은 인사혁신처의 성과주의 강화로의 개혁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먼저,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2명이 해당 부처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되자 사표를 제출했음. 작년 말,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능력·성과 부진이나 비위 등의 이유로 재교육이 필요한 10여 명이 기관장 추천 등을 거쳐 성과 향상 시범교육 대상에 포함 되었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 10명

안팎의 저성과 고위 공무원이 재교육을 받고 있음. 이에 중앙 2개 부처 소속 각 1명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

- 한편, 세종시 산하 6~9급 공무원 42명이 2015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서로 재분배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됨. 가장 높은 등급(S)을 받은 직원이 최대 99만 원을 되돌려 받고, 최저등급(B) 직원에게 최대 89만원을 더해주는 식으로 재분배해 성과상여금의 격차를 줄인 것.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개인 별 지급액 차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과 소외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힘.
-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 관계자들은 작년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자택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음. 핵심은 성과연봉제의 강화,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반대임.

## ☞ 당의 입장 및 대응

- 인사혁신처의 성과주의 강화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기본적으로 성과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임. 무엇보다 ‘공공성’이 핵심이 공직사회에 삼성 출신의 이근면 처장을 필두로 한 민간기업 방식의 무리한 적용이 오히려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인사혁신처의 성과주의적 개혁은 기존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인사 및 보수를 책정한 것을 전면 개혁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과를 기준으로 승진 및 보수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물론 원론적으로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능력에 기반을 둔 관료체제로 개혁하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직무’에 대한 타당한 ‘성과’평가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 나아가 성과기준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합의과정이 부재한 채 성과를 곧바로 보수와 승진체계에 연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이 제도를 회피하도록 야기하고 있는 것.

- 무엇보다 공무원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합의할 만한 성과 기준을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분류 및 업무 기준 정비를 통한 채용, 배치, 승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일단 성과주의를 통해 경쟁을 가속화시키자는 것으로서 선후가 바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 또한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는 상황. 성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직무 동일임금의 원칙을 기본으로 두고 그 바탕 위에 성과급 제도를 강화해야 함.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것. 일례로 인사혁신처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에 대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임용기간과 임용권자, 법적 책임이 다 다르다”면서 “무조건 순직을 인정할 경우 정규교원의 반발 등 혼란이크다”는 이유로 ‘순직인정 불가’ 입장을 밝혔음.
- 이러한 방식의 인사혁신처 개혁은 공무원 사회가 자신이 일한 만큼 성과급으로 보답 받는다는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기 보다는, 불합리한 성과기준과 불평등한 처우를 바탕으로 보여주기식 성과, 윗사람에게 잘보이기식 성과를 유도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써 공직사회의 책임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2. 지방자치

### ○ 지방소득세 독립시켜놓고 세무조사는 금지?

-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의사 일정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행을 겪음.
- 당초 강기윤(새누리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회의 시작부터 조원진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지방세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거부해 소위 위원 간 의사진행발언만 오가다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산회됨.
- 친박 실세인 조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권한 중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조 의원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지자체 세무조사를 국세청 세무조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
- 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되면 여기에 단순히 세율 10%를 부가하여 징수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별도의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독립세로 전환하였음.
-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들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자 행정자치부는 법인의 사업

장이 2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행자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양측의 세무조사를 일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은 포함되지 않았음.

- 하지만 이미 조원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친박 실세인 조 의원은 여야간사 간 합의조차 무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 전경련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
-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 ☞ 당의 입장과 대응

-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세액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함.
-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는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신고한 자료를 검증할 수 없게 되며 과오납 규모가 늘어나고 탈세와 세무비리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들도 모두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대기업이 조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부담으로 여길 이유가 없음.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는 지나친 과장이고 '경영상 상당한 차질'은 업살에 지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대기업 소원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후퇴시키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를 저지할 필요가 있음.



### 3. 여성

#### ○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의해야

##### ▶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 발표

- 2014년 3월 26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2014년 4월 16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첫 번째로 12차에 걸쳐 열렸으며, 2015년 11월 2일 한·일 정상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합의 한 것이 2015년 연내 타결로 이어진 것임.
- (한일 합의 주요내용)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의 통감”과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한국정부가 설립하기로 한 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대략 10억엔” 출연, 이러한 조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상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및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임.

##### ▶ 피해자들의 의견의 배제와 절차의 부적절성

-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46명으로 지난 1년간 9명의 국내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중 생존자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진상규명과 법적배상에 대한 내용도 없는 합의가 진행된 것임.
- 공동의 합의문과 양국 정부의 공동 서명도 없는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타결을 선언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함.

※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홈페이지 명시된 활동 목적

- 정대협은 “일본제국주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생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 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본군위안부 범죄 해결을 위한 7가지 요구사항
  - ① 일본군위안부 범죄 인정
  - ② 진상규명
  - ③ 국회결의사죄
  - ④ 법적배상
  - ⑤ 역사교과서 기록
  - ⑥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 ⑦ 책임자처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0. 11. 16 결성, 90년대 초 일본정부의 망언에 대응하여 37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들 중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이후 정대협 결성단체가 된 것임, 또한 정대협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전시 중 여성인권 유린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확산시켜 온 바 있음)

▶ 일본측의 사실과 책임의 인정 여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온 바 있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져 왔음.
- (일측 표명사항)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또한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 그러나 “위안부 여성”이 1832~1942년 사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 전역, 주로 11개의 일본 식민지 국가로부터 수십만 명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획되고, 조직되고 제도적으로 실행된 인신매매와 성노예제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

의 관여 하' 라는 표현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굉장히 모호한 표현임.

- 또한 과거 1995년 일본국민으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일본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과의 편지 내용과 동일함. 사실과 책임에 대해 과거 '도의적'이란 표현을 생략하여 2015년에는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고는 하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는 과거 국민기금을 거부하며 20년간 법적책임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임.

▶ **위안부피해자 재단설립과 대략 10억엔(한화 96억원) 출연**

- (일측 표명사항)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 정부가 10억엔을 전제로 최종 합의를 수용하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제기해온 '한국이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약해졌으며 현재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다"라고 보도되는 기시다 외상의 말은 과장된 허언이 아닌 것임. 또한 일본 정부는 뒤에서 예산만 지원할 뿐 지원 사업의 주체는 우리 정부가 되면서 책임의 소지도 흐린 것이 사실임.
- 12·28 합의 직후 기시다 외상은 일본 취재진에게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바 있으며, 결국 이는 '도의적 책임'을 따른 '인도적 지원금'인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임.

▶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및 한국정부의 과도한 수용**

- "일본 측으로서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그 결과로 (소녀상이)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적절하게 이전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적절히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준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합의임.

## ☞ 당의 입장 및 대응

- 이러한 합의 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을 빌려 합의·타결함으로써 협상의 정체가 모호하며 구속력과 규범력이 의심스러운 바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 없이 진행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정의당은 재협의를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합의에 관여한 외교장관 등의 과면 등과 함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 성명 촉구 등 굴욕적인 합의를 이끈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현재 이번협약에 대한 여론조사<sup>1)</sup>에서도 합의 결과에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높으며, 소녀상 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이번 합의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앞과 외무성 앞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 25개 도시에서 집회와 1인 시위가 벌어질 예정임.
- 합의 내용적으로도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 인권증진,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한 당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1)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 조사 결과,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선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3.7%, 만족한다는 응답이 35.6%임. 정부 발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선 ‘소녀상 이전에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4.4% ‘반대한다’고 답함. (리얼미터 조사)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체의 66.3%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한다’는 응답(19.3%)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

-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성노예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 규명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책임 있는 절차와 과정을 전제로 한 재협의를 이뤄지도록 해야 함.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절차상 정당성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12.28 합의를 파기하고 이번 합의 문제점과 기만성을 폭로하여 여론의 지원을 받으며 한·일 양국이 진정한 해결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 4. 과학기술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성적 화려, 질적 성과 최저... 혁신노력을 자극하는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양적 투입과 성과는 세계적, 질적 성과는 취약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2월 18일(금) 2015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함.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혁신역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등 5개 부문 13개 항목(31개 지표)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14년 7위에서, '15년 5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자원은 9위에서 6위, 네트워크 11위에서 8위, 환경은 23위에서 22위, 성과는 10위에서 8위로 올라갔으며, 활동은 2위에 그대로 머물렀음. 상대적으로 지원제도 및 문화 등의 환경 부문 지수는 20위권에 머무르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별로 볼 때,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중,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 등은 세계 1위, 연구원 수와 특허 수,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 등은 세계 4위를 나타내는 등, 예산과 인력 등 양적인 투자와 특허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음.

- 반면, 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 간 기술협력,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등은 각각 22위, 26위, 29위를 기록하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6위,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은 19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16위,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는 16위 수준으로 나타남.

###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첫째, 인력·예산(돈) 투자는 세계 최고인 반면, 질적 성과는 최저 수준인 것은 그만큼 투입 대비 산출이 낮아 이른 바, 생산성(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임. 이는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지표가 26위(30개국)라는 성적표가 보여줌.
- 둘째,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효율성을 좌우했던 것은 네트워크 부문이었음. 특히 기업 간 협력과 국제협력이 중요한 데, 22위, 14위/17위 등 중위권 혹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것이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셋째, 연간 특허 수와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가 세계4위로 상당히 높음. 반면, 최근 15년 SCI 논문 수 10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29위로 최저수준인 것은 정부가 양적 측면 특허 수 제고에 성과가 있었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함.
- 넷째, 국민 저변의 과학기술과 문화적 태도는 중위권이나 최저 수준임.
- 마지막으로, 이상적 R&D환경 구축 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창업활동 지수가 18위로 중하위권을 나타내기에, 과학투자는 신생기업 창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의 과학투자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신생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 당의 입장 및 대응

#### ▶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 통한 질적 성과·혁신경쟁력 제고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역시, 막대한 예산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저생산성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전체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가 세계5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수준인 것은 양적 투입과 성과가 주된 평가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임. 이는 국가전체의 과학기술·R&D 혁신노력을 감소시키게 함. 질적 성과 지표를 추가·보강하는 등 혁신노력을 자극하는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이 요구됨. 현재 우리나라 R&D 국가혁신경쟁력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음.

- 우선, R&D 투자 효율성(생산성)이 저조하므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를 제안함.
- 둘째, 과학기술 고용률과 고급인력 배출이 낮기에, 과학·공학자 직업 비율, 과학·공학 박사학위 배출 지표를 추가해야 함.
- 셋째, 기초연구 경쟁률이 낮기에, 국가 기초연구 비중, 우수 논문 발표 수, Nature 출간 경쟁력, 노벨상 수상자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 넷째, 국제화 지수가 낮기에, 연구 결과 중 국제공동연구 기여도, 국제 기술이전 지수, 국제 공동발명 등을 새로운 지표로 보강해야 함.
- 다섯째, 양적 성과는 높지만, 질적 성과는 낮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제 특허 출원 양은 많으나, 유용한 특허는 적은 것임. 그러므로 국가별 특허 인용 지수 지표를 추가해야 함.
- 마지막으로, 신생기업의 숫자가 작으며, 기술경쟁력이 낮기에 45세 이하 신생 기업, 신생기업 특허 보유율 등의 지표 보강이 요구됨.
- 상기의 6가지 분야 13개 지표\*가 추가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R&D 경쟁력의 취약한 부분이기에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는 하락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혁신노력을 자극하여 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임.

\*국양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KISTEP 주최 포럼에서 ‘과파적 혁신의 과학기술’ 주제로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R&D 국가혁신 경쟁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지표들을 참고했음.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 부문별 추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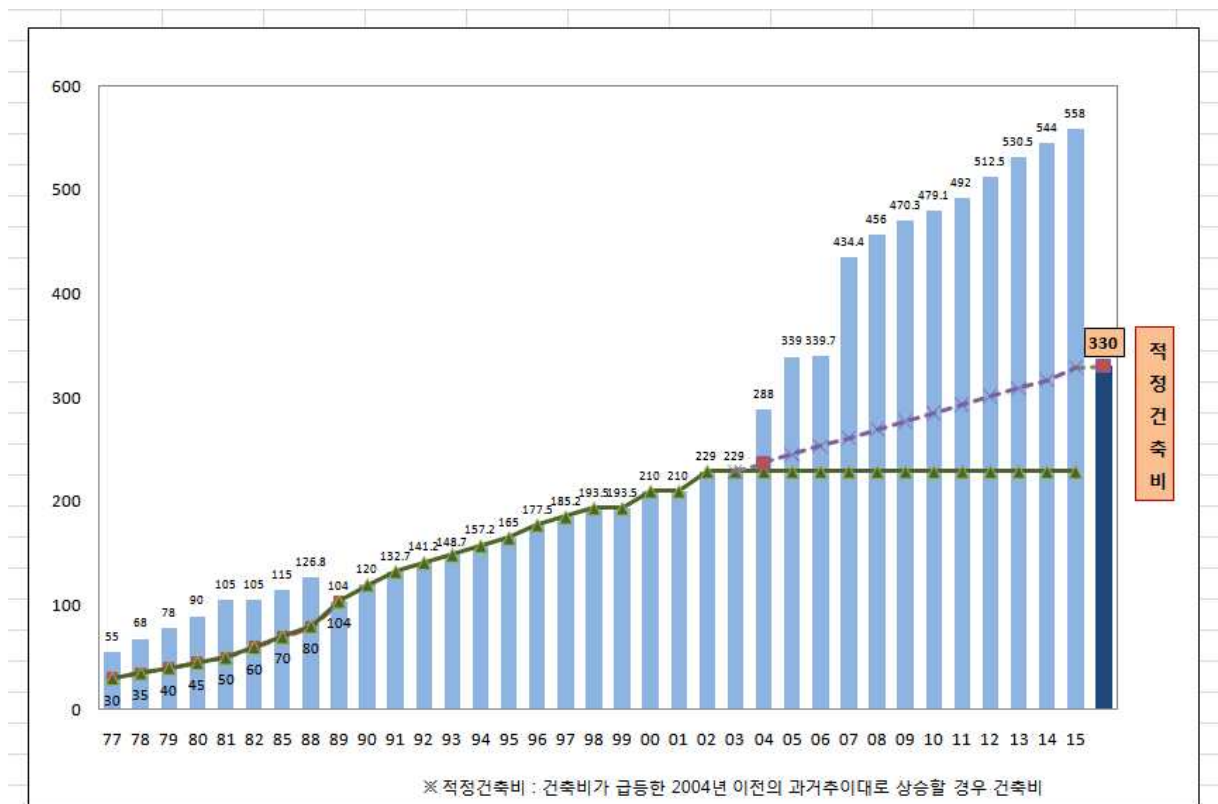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투자 분야</li> <li><b>기초연구비중</b></li> <li>◦ 창업 활동 분야</li> <li><b>+ 45세 이하 신생 기업, 신생기업 특허 보유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협력 분야</li> <li><b>+ 국제공동연구 기여도, 국제 기술이전 지수, 국제 공동발명</b></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성과</li> <li><b>+ 기술무역수지비</b></li> <li>◦ 지식 창출 분야</li> <li><b>+ 국가별 특허 인용 지수, 우수 논문 발표 수, Nature 출간 경쟁력</b></li> <li>◦ 인력 창출 분야</li> <li><b>+ 과학기술 고용률, 고급인력 배출, 노벨상 수상자수</b></li> </ul>



## 5. 주택·건설

###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근거 없이 부풀려져 고분양가 유도

- 지난 2014년 12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되었지만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 정부는 매년 2차례(3월, 9월)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 발표 기본형 건축비는 실제 공사원가보다 지나치게 높고 근거 없는 가산비용까지 허용하고 있어 고분양가 책정과 소비자 바가지 분양을 유도하고 있음. 오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잘못된 법정건축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법정건축비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그림> 정부 발표 법정건축비 현황

<단위 : 만원/평>

▶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어거지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 ‘공기업도 장사, 10배 이윤’ 등을 내세우며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던 참여정부가 집값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하지만 분양원가인 기본형 건축비를 근거도 없이 부풀려 책정하여 고분양가를 유도하고 민간건설사에게 불로소득을 안기고 있음.

▶ **근거 없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까지 허용, 고분양가를 유도**

- 2000년 분양가자율화 이전까지 정부는 분양가를 강력히 규제했고, 당시 정부가 발표한 법정건축비는 평당210만원(2000년 기준)으로 20년 전의 건축비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 1982년 분양된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분양가는 평당68만원이었고, 90년대 공급된 분당 등 1기 신도시도 분양가는 평당1~200만원대였음. 하지만 참여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의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는 평당339만원으로 김대중 정부보다 무려 1.5배나 되는 건축비를 책정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가산비용까지 허용해주었음. 이로 인해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화성동탄 아파트도 건축비가 평당500만원까지 책정되었음.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 추세대로 건축비가 산정됐다면 지금 건축비는 평당330만원정도가 적정함.

▶ **도급가액 기준 건축비는 평당300만원, 소비자 부담 건축비는 평당700만원**

- 오세훈 서울시장 때 SH 공사가 공개한 상암, 장지, 발산 등 15개 지구의 평균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S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가액 기준임. 하지만 2015년 기본형건축비는 560만원으로 여기에 가산비용까지 허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는 평당 700만원대까지 상승(마곡8단지 건축비 평당711만원, 2015. 8)

▶ **모양(설계도면)과 질(시방서)을 알 수 없는 기본형 건축비**

-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건축비가 산정되기 위한 기본형 주택의 모양(설계도면)과 질(시방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기본형건축비만 10년째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 이익을 안겨주고 있음.

#### ☞ 당의 입장 및 대응

- 높은 법정건축비는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고분양가 책정을 유도하며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법정건축비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함.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된 위례신도시(4.6만 가구), 다산신도시(1.8만 가구)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 건축비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도급가액과 비교하여 건축비 거품을 드러내야 함.
- 특히 ‘기본형 건축비’가 산정근거인 모양(설계도면)과 질(시방서)도 없이 공개되는 만큼 다양한 표준주택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표준건축비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함. 표준이 설정되면 부실공사가 줄고, 대량생산 체계 구축으로 건축비도 낮출 수 있음.
-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 등의 건축원가를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고, 나아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한 분양원가를 가공,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 건축비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노임과도 직결됨. 지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는 높으나 실제 가장 큰 건축비 항목인 건설노동자(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일한 대가는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임.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정임금을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건축비는 적정건축비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 북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국 정부 등의 강경 대응, 위기에 처한 한반도 민중의 민생과 평화

#### ▶ 북의 수소폭탄 실험 전격 실시, 신년사와 모순?

- 1월 6일 오전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전격 실시함. 조선중앙TV는 6일 12시 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 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진도가 5.1이라면 7.3킬로톤 TNT의 폭발력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분석.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핵분열탄(원자폭탄)이 약 22킬로톤 TNT였기에, 그 3분의 1에 불과한 위력의 수소폭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음. 마치 이런 의문에 답하려는 듯이 북은 이번 발표에서 자신들이 "새롭게 개발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주장함. 이번 실험이 수소폭탄이 아닌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의 중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라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북한의 공식 발표를 뒤집을만한 근거 있는 과학적 주장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할지라도 소형화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핵능력이 크게 증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한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노동당 제1비서는 1일 12시 30분(평양시간 12시)에 신년사를 발표함.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는 핵무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특히 신년사에서는 핵무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수소폭탄 실험을 전격 실시한데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보당국의 정보 파악과 분석의 실패는 결코 면책될 수 없음.

- 북 신년사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신년사에서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책동과 위협’을 언급하였고, 2015년에는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한 바 있음. 그에 비해 올해 신년사에는 자신들의 핵무기와 병진노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음. 그러나 ‘조선반도가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 있다’, ‘미국 등이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벌여놓으면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 등을 비판하고,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해 그 동안 추진해 온 핵무기의 위력 및 수량 증강과 그것을 발사할 장거리 및 수중 미사일 등의 개발은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
- 한편 김정은 제1비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도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꼭 집어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냄.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지난해 남북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8.25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함.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운운하며 중국 등 관련국가와 유엔 등을 돌며 통일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역설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실천적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함으로써 대화의 재개와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게 됨.

▶ 박 대통령, "강력제재로 북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 천명과 "정쟁중단" 요구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함.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함.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악법 등을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니 무조건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내뱉는 한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조기 통과를 압박함.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 예상됨

- 안보리는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갖고 3년전 대북제재 결의를 상기시킴. 북의 3차 핵실험 후 23일만인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 아직 제재의 구체적 내용 등은 추측의 수준에 불과하나, 과거 이란에 대해 행했던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경제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언급되고 있음.
- 지금까지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도 기인했지만, 북한의 대외무역 등 경제관계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없었음. 중국은 이번 핵실험 이후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이전까지와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것도 있고, 작년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에 류원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참석해 북중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하며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핵 관련 발언과 행동의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임. 중국이 국제사회의 저강도 제재가 아닌 고강도 제재에까지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지만, 상반기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

는 예측이 보여주듯 당분간 북중관계도 냉각을 면치 못할 것임.

## ☞ 당의 입장 및 대응

— 북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함께, 정보예측에도 실패하고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북의 핵능력 증강을 손놓고 바라만 보고있는 정부의 무능 비판 및 국내정치에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임.

### ▶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태롭게 함

— 북한은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 등의 위협에 맞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 운운했으나, 이는 언어도단임. 핵무기 보유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고 권리라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핵무기 실험 및 보유 자체가 인류 문명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반평화적 행위일 따름임.

—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려는 일본의 핵보유 야망을 부추기는 등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강화시키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 설사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이란과 쿠바는 다른 선택을 했고 미국과 관계도 정상화함. 미국과 북한 관계만이 적대적 관계를 치닫고 북한은 그것을 이유로 핵개발과 보유라는 반 평화의 길을 가야할 이유가 없음.

—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를 주장함.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커녕 당분간 대화의 자리에조차 앉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북한 위협을 핑계 삼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결국 대중 군사적 봉쇄를 획책하는 최근의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짐. 거기에 일본의 전쟁국가로의 변신과 중국의 군비증강 정책이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악순

환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3년간의 전쟁 후 60여년을 지속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가 염원하는 바임.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도 문제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자신들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병진노선을 고집하는 북한의 정책 역시 계속 지속되는 한, 한반도는 평화체제는커녕 만성적인 불신과 불안, 대결체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즉 이번 핵실험과 같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해가 되는 북한의 행위는 결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음.

▶ 북의 핵실험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의 생활 향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

-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남한은 물론 중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형식적이거나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 경제의 위기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와 국제적 관계·환경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짐. 이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인민 생활 향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임. 최고지도자가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정치’ 구현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구호로만 그치며 경제 등 민생의 실질적 개선은 큰 진전이 없고, 인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정치적 정당성과 단결을 군사적 위력의 과시와 외부와의 긴장관계를 통해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애민 정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 남북관계도 당분간 개선은커녕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의 이번 행위는 김 위원장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임.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던 사람들의 기대와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처한 것에 큰 책임. 각종 악법 통과 강행과 선거 이용 등 국내정치 악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노력하겠다고 천명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손놓고 바라보기만 했음.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한 미국의 뒤에 서 있었을 뿐, 위



기에 빠진 한반도비핵화를 구출할 어떤 적극적인 정책도 전개하지 않았음. ‘통일대박’만을 떠들며 수차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도 다 놓쳐버렸고,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의 무사안일과 무능 역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더욱이 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비단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정당화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민생법과 정책의 무조건 통과 등 공안분위기 조성과 선거 등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행동을 보이려 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북한 위협을 빌미로 국내적 평화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을 구출할 특단의 노력과 대책 필요**

- 비록 북한 당국의 행위에 의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큰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통한 통일의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음. 때문에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 역시 강력히 촉구함.
- 특히 국제공조 운운하며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된 국제적 제재와 그 강화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 등을 염두에 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북의 핵능력 강화를 방치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주장하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주장은 한미동맹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낮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이 결코 취할 수 없는 정책이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오히려 방조하고 일본의 핵무장과 중국의 강경대응 등의 악순환에 의해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임. 집권여당의 고위직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갉아먹는 행태임. 대중의 분노와 불안에 기대어 무책임한 강경책을 쏟아내고 흡수통일을 획책하거나 국내정치에 북한 문제를 이용하려는 행태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관계 개선 등 한국민 및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의 전략적 목표를 저해하고 있음.

-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 개발과 능력 증강의 핑계로 삼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관련 당사국 모두가 합의했던 9.19공동성명의 포괄적 해결의 정신을 살리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임. 당시에 비해 북의 핵능력이 크게 증강되는 등 변화한 현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임.

## 7. 정치

### ○ 청와대-새누리당, 노동개약, 정치개약 시도

- 12월 31일(목)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지역선거구를 확정하라는 재개정 입법의 마지노선이었음.
-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확정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번번이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좌절되었음.
- 새누리당은 경제개약, 노동개약의 ‘선 쟁점법안 처리, 후 선거구 확정 처리’를 고수하며 의회정치를 파행시키고 있음.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음.
- 더구나 북한의 한반도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수소폭탄 실험 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내부정쟁을 중단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사실상 쟁점법안 통과를 종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의장은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부.
-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끈 배후에는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거덜 내도 빠지지 않을 40%의 콘크리트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움짱달짝 못하게 하여 정당의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있음. 김무성 대표의 식물대표화.

### ○ 선거구 미확정 장기화, 새누리당 의회정치 파괴 공작

-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지점, 거수기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음. 또한 새누리당의 허수아비 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앞장서서 무력화시키고 있음. 집권다수당의 대표로서 정치력을 전혀 발휘할 생각이 없으며 총선 후 대권을 위한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있음.
- 국회의장은 선거구 확정안을 1월 8일(금) 직권상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의 현행안 유지하는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획정위도 몇 번의 협의 파행을 거치면서 획정안 마련에 실패하였음.

- 더욱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후퇴하는 것임. 선거구 획정 논란 초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더 이상 협상 진전이 어렵게 되자, 이를 제외하고 느닷없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20대 총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이면,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정신 나간 행보를 보였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협상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야권과 시민사회에 깊어지고 있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
-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장기화 할 조짐. 이것은 모두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의회정치,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임.

### ○ 안철수 신당 추진, 득과 실

- 안철수 의원이 12월 13일(일) 전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여 신당을 추진하고 있음.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직후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주역인 안철수 흔적지우기라고 볼 수 있음.
- 안철수 의원은 지역을 순회하며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정치행보.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주역인 김한길 의원도 탈당하였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9명임. 그리고 호남, 충청, 인천의 지역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도 탈당 대열에 합류.
- 연초 각종 여론에서 안철수 신당 창당시 지지율이 10% 후반대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음. 여기에는 주로 더불어민주당, 일부 새누리당, 무당파, 호남지역, 수도권지역, 3040세대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고 있음.
-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야권에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는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야권분열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현재 안철수 신당의 성패를 교섭단체 구성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이종걸, 박영선, 박지원 의원 등이 탈당하여 결합하면, 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임. 그 분

기점은 1월 말, 2월 초가 될 것임.

- 안철수 신당이 창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며 탈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결속에 집중.

## ☞ 당의 입장과 대응

- 선거구 획정 문제는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정치피로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졸속협상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구 획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회농성을 지속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공동대응을 제안해야 함. 특히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의 비판의 방향은 선거구획정 문제를 넘어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필요함. 또한 김무성 대표의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는 무능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함.
- 총선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함. 안철수 신당 창당, 야권분열 등 소수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정치유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상대방과 정치협상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어야 함.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단호함의 정치’, 야권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는 정치’가 필요함. 당을 부각시키는 전국적인 선거전략이 요구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도권, 영남, 호남 등 지역전략이 강하게 요구됨. 당과 후보의 이야기를 야권연대 지역별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시켜야 할 것임.